

「평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8월 26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2024년 9월 5일 회부
- 상정일자: 제29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4년 9월 5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환경과장)

가. 제안이유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에 따라 같은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군의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기본원칙, 책무를 규정(안 제1조 ~ 제5조)
-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및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안 제6조 ~ 제8조)

-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9조 ~ 제19조)
-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시책 추진(안 제20조 ~ 제28조)
-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을 위한 지원(안 제29조 ~ 제3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영옥)

※ 검토보고서 전문 [붙임 1]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없음」

6. 심사 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사항: 「없음」

붙임 1. 평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검토
보고서 1부.

2. 평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1부.

「평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조례안 개요

- 제 안 자 : 평창군수
- 제안일자 : 2024. 8. 26.
- 회부일자 : 2024. 9. 5.
- 상정일자 : 2024. 9. 5.

2. 제안이유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에 따라 같은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군의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기본원칙, 책무를 규정(안 제1조 ~ 제5조)
-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및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안 제6조 ~ 제8조)

-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9조 ~ 제19조)
-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시책 추진(안 제20조 ~ 제28조)
 - 신재생에너지 전환, 녹색건축물 활성화, 녹색교통 활성화, 친환경차 보급 확대, 탄소흡수원 확대, 지역 물관리 사업, 폐기물 감축 및 자원 순환 등
-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을 위한 지원(안 제29조 ~ 제35조)
 -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 기후대응기금 설치, 탄소중립이행책임관 지정 등

4. 검토의견

가. 관련 근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제정에 따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나. 입법의 취지

-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우리 군의 대책을 강화하고 체계화하여 녹색성장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국가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지역사회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평창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10년의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시행하게 하고 그 추진상황 등을 매년 점검하도록 함.
- 안 제9조부터 제19조까지는 우리 군의 녹색성장 추진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주요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평창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두고 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함.
- 안 제20조부터 제28조까지는 공공기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준수, 신·재생에너지 전환, 녹색건축물 및 녹색교통 활성화, 친환경차 보급 확대, 폐기물 감축 및 자원순환 등 우리 군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함.
- 안 제33조(탄소중립 지원센터·설립·지정·운영 등)에서 상위법령에 따라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34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에서는 군의 특성에 맞는 기후 위기 대응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
- 안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에서는 본 조례안의 제정에 따라 이전에 녹색성장 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규정하였던 「평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5. 종합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우리 군의 녹색성장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제정의 취지가 인정되고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저촉되는 사항 없이 규정된 것으로 확인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이 선언적인 조례에 그치지 않도록 실효성을 갖춘 계획과 사업들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므로 관심 있게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개선과 재정투자, 시설 및 시스템 구축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사업자 및 국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시·군·구 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가기본계획, 시·도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군·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2조(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2050 지방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지방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③ 지방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기능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기업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환경오염·훼손에 종합적·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환경의 변화나 자연재해 등으로 농업 등 기존 산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취약 지역 및 계층 등을 중점적으로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65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의 구성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발적인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참여하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68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의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과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에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9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평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안 번호	320
----------	-----

제출년월일 : 2024. 8. 26.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에 따라 같은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군의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마련

※ 기존 「평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폐지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기본원칙, 책무를 규정(안 제1조~제5조)

나.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및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안 제6조~제8조)

다.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규정(안 제9조~제19조)

라.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시책 추진방향 설정(안 제20조~제28조)

(신재생에너지 전환, 녹색건축물 활성화, 녹색교통 활성화, 친환경차 보급확대, 탄소흡수원 확대, 지역 물관리 사업, 폐기물 감축 및 자원순환 등)

마.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을 위한 지원안 마련(안 제29조~제35조)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 기후대응기금설치, 탄소중립이행책임관 지정 등)

3. 참고사항

- 가. 입법예고(2024. 7. 17. ~ 2024. 8. 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평창군 공고 제2024-1039호, 환경과-3351(2024. 7. 17.)호
- 나.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기획실-9240(2024. 6. 17.)호]
- 다. 부패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기획실-9240(2024. 6. 17.)호]
- 라.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가족복지과-21523(2024. 6. 20.)호]
- 마. 법제심사 : 적정 [기획예산과-2549(2024. 8. 9.)호]
- 바.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원안의결[기획예산과-2797(2024. 8. 14.)호]

평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사회·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부문·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평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제·사회·교육·

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2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자신이 시행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사업자 및 군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군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①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군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계획

제6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군은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지역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군은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평창군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평창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비전
2. 법 제8조제1항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 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7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평창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 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3장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9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군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평창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평창군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7.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강원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평창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탄소중립 정책 관련 과장급 이상 공무원
3.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 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전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제16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7조(위원회 사무국)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제18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9조(수당 등) 위원 및 기타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시책

제20조(지방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군수는 관할구역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등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21조(신·재생에너지 전환) ① 군수는 관할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도로·교통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체육관·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재생에너지시설 보급·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22조(녹색건축물의 활성화) ①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기준·절차를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의 기준·절차를 준수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녹색교통의 활성화) ① 군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친환경차 보급 확대) 군수가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

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제4호·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탄소흡수원 확대) ①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자 또는 군민이 탄소흡수원등의 조성·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 훼손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을 할 수 있다.

제26조(지역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① 군수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군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정확성·완전성·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지역 물관리 사업) 군수는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군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폐기물 감축 및 자원순환) ① 군수는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폐기물 발생량 감축 등 정책 발굴·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자원의 재활용·재사용 등이 활성화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

제29조(협동조합의 활성화) ① 군수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 내 설치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을 행정적·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방법·절차는 군수가 정한다.

제30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① 군수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에 참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실천연대가 시행령 제60조제7항에 따라 필요한 인력 및 운영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의 파견이나 그밖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1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① 군수는 군민의 생산·소비·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과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군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32조(국가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 등) ① 군수는 법 제68조제1항 및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립·지정된 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원센터 운영계획

2. 지원센터 인력·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3. 지원센터 운영 예산 조달 계획

4. 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명세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4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① 군수는 군의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군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35조(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탄소중립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을 탄소중립이행책임관으로 지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또는 「평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수립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은 이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계획·대책으로 본다.

관계법령 발취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208호]

제22조(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③ 지방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기능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69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4. 2. 15.] [법률 제34194호]

제7조(탄소중립시·군·구계획의 수립 등)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탄소중립시·군·구계획의 수립·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63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 ①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탄소중립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중에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5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의 시행으로 인한 비용 발생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도시안전국 환경과장 전원표
연락처	(033) 330 - 2340